

새 정부의 政策課題

1997.11

韓國經濟研究院

< 目 次 >

I. 問題의 提起	1
1. 經濟危機의 實狀	1
가. 企業不渡 擴散	1
나. 企業의 設備投資 激減	2
다. 國際競爭力의 持續的 下落	2
라. 輸出鈍化와 外債增加	2
마. 金融·外換 危機	4
바. 複合不況 發生 可能性	5
2. 經濟危機의 原因	5
가. 高費用의 經濟構造	5
나. 低效率의 經濟構造	7
다. 金融實名制의 副作用	7
라. 對內外 經濟環境變化에의 對應 未洽	8
II. 政策目標와 새로운 틀	9
1. 政策目標	9
2. 새로운 經濟運營의 틀	10
가. 市場原理에 의한 經濟運營	11
나. 글로벌리제이션에 對應한 經濟 運營	11

Ⅲ. 새 政府의 政策課題	13
1. 經濟危機 克服을 위한 緊急對策	13
2. 작고 效率的인 政府	17
3. 企業하기 좋은 經濟環境	28
4. 成長 潛在力 擴充을 위한 基盤造成	41
5. 삶의 質 向上을 위한 環境 및 社會保障制度 確立	56
6. 經濟를 뒷바침하는 低費用 政治構造	60
7. 韓半島 平和·繁榮을 指向하는 南北關係	63
8. Global 體制에 對應하는 對外政策	65

I. 問題의 提起

1. 經濟危機의 實狀

가. 企業不渡 擴散

- 최근 企業 不渡가 中小企業에서 大企業까지 확산되면서 景氣沈滯가 심화되고 있음.
- 97년에 들어와 31개 上場社의 부도, 50대 대기업중 9개사의 부도직면 등 企業의 連鎖倒産이 발생하고 있음.

<표 1> 전국 어음부도율 및 상장사 부도추이

(단위 : %, 개)

연 도	90	93	94	95	96	97. 1/2
어음부도율(%) ¹⁾	0.09	0.23	0.26	0.29	0.25	0.45
상장회사부도(개사)	-	8	8	3	7	31 ¹⁾

주: 1) 97년의 경우 11월 초 현재 부도유예협약적용 기업포함,

자료 : 한국은행

- 不況이 장기화될 경우 企業倒産은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음.
- 많은 大企業이 財務構造가 취약한 상황에서 매출부진으로 赤字狀態에 있기 때문에 不況이 장기화될 경우 追加 倒産이 예상됨.
- 上場社의 당기순이익이 97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대비 30%나 줄었으며, 571개사중 106개사가 赤字를 시현하였음.

나. 企業의 設備投資 激減

- 企業의 投資가 최근 들어 急激히 減少하고 있어 成長鈍化와 함께 우리 經濟의 成長 潛在力이 低下될 우려가 있음.

<표 2>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¹⁾

(단위: %)

연 도	80-85년 ²⁾	86-90년 ²⁾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³⁾
국내총생산	6.3	10.1	9.1	5.1	5.8	8.6	8.9	7.1	6.1
총고정투자	4.7	16.2	12.6	-0.8	5.2	11.8	11.7	7.1	-0.3

주: 1) 증가율, 2) 연평균치, 3) 추정치

다. 國際競爭力의 持續的 下落

- 高金利, 高賃金 등 高費用·低效率 構造로 인해 國際競爭力이 持續적으로 下落하고 있음.
- 스위스 國際經營開發研究所(IMD)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國家競爭力은 세계 46개국중 95년 26위, 96년 27위, 그리고 97년에는 30위로 하락하고 있음.

라. 輸出鈍化와 外債增加

- 90년대에 들어와 經常收支 赤字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90-97년 간 經常收支 赤字累計가 615억달러에 달하고 있음.

<표 3> 경상수지 추이

(단위: 억달러, %)

연 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¹⁾
경상수지	-87	-45	3.8	-45.3	-89.5	-237.2	-150
총수출 ²⁾	10.5	6.6	7.3	16.8	30.3	3.7	8.0
총수입 ²⁾	16.7	0.3	2.5	22.1	32.0	11.3	-0.5

주: 1) 추정치 2) 증감율

- 輸出商品은 價格競爭力뿐 아니라 品質·技術競爭力까지 잃고 있어 미국, 일본 등 先進國 市場에서 市場占有率이 계속 下落하고 있음.
- 輸出物量은 증대하고 있으나 輸出單價가 크게 떨어져 輸出企業의 採算性이 持續的으로 惡化되고 있음.

<표 4> 수출단가 추이

(단위: %)

	96. 1/4	96. 2/4	96. 3/4	96. 4/4	97. 1/4	97. 2/4
단 가	-1.8	-11.9	-15.9	-20.1	-19.8	-14.5

주: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자료: 한국은행

- 經常收支赤字의 누적에 따라 外債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총외채는 95년 말 784억불에서 크게 증가하여 97년 말에는 1,300억불(GDP 대비 총외채율 27%)로 이에 따라 97년에 外債利子支給額이 75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마. 金融 · 外換 危機

- 不實債權 증가로 일부 市中銀行과 綜金社의 倒産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金融機關의 信用萎縮으로 신용경색이 가중되고 있음.
 - 부도에 직면한 7개 大企業의 利子支給不能 與信規模는 20조원에 달하고 있음.
 - 은행의 총여신 대비 不健全與信 비율은 96년말 4.1%에서 크게 증가하여 97년 말 7%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됨. (95년 日本의 金融危機時 전국은행의 不健全 與信比率은 5.5% 수준에 불과했음)
 - 30개 綜金社의 不渡企業관련 與信이 8월말 현재 총 5조2천억원으로 總自己資本 4조5백억원보다 큰 규모여서 일부 綜金社는 자본잠식 상태임.
-
- 對外信用度 하락으로 금융기관의 海外借入이 중단되는 등 극심한 外貨資金難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화가치의 급락이 초래되어 外換危機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지난 4월 미국 무디사는 일부 국내 은행의 信用等級을 하향조정하였으며, 최근에도 S&P사와 무디사가 國家信用等級 및 금융기관 신용등급을 추가로 하향 조정하였음.
-
- 원화환율 급등 및 株價 폭락 등으로 外換市場 및 株式市場이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음.
 - 企業倒産의 확산, 景氣回復의 불투명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증시가 탈이 지속되고 있으며 不安心理 증폭으로 投賣현상이 초래되고 있음.

바. 複合不況 發生 可能性

- 實物部門과 함께 金融部門의 부실로 複合不況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부도방지협약 대상기업들의 정상화 지연, 대기업의 연쇄부도 발생으로 實物經濟의 급격한 沈滯가 우려됨.
 - 金融機關 不實與信 增加와 不動產價格 하락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으로 일부 金融機關의 倒産이 예상됨.
 - 외화자금난이 지속되어 외환위기 발생이 우려됨.
- 이와 같은 實物, 金融, 外換市場의 위기상태를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는 複合不況에 빠질 우려도 있음.

2. 經濟危機의 原因

- 우리 경제가 危機에 직면하게 된 근본원인은 高費用·低效率의 經濟構造 및 對內外 經濟環境에 對한 對應未洽 등에서 찾을 수 있음.

가. 高費用의 經濟構造

- 國際水準보다 2배이상 높은 高金利
- 國內金利水準이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여 2배 이상 높은 상황임.
- 高金利로 인한 기업의 매출액대비 金融費用負擔率이 96년말 현재 5.8%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일본 및 대만 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임.

— 勞動生産性を 초과하는 賃金上昇

- 賃金水準이 주요국의 평균치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임.
- 賃金上昇率이 生産性增加率보다 높아 單位勞動費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5> 임금·노동생산성·단위노동비용 증가율 추이

(단위: %)

	88년	90년	92년	94년	95년	96년
임금증가율	15.5	18.8	15.2	12.7	11.2	11.9
노동생산성	13.2	15.7	8.8	9.8	11.1	7.9
단위노동비용	16.6	23.7	16.6	12.4	15.0	-

주: 전산업의 명목임금증가율

— 國際水準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高地價

- 國內 地價水準이 주요국에 비해 2~5배 이상 높은 수준임.

— 國際水準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物流費用

- 도로, 항만 등 社會間接資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여 物流費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표 6> 주요 요소비용의 국제 비교(1996년)

	금리 (%)	임금 (US\$/hour)	토지가격 (US\$/m ²)	물류비용/매출액 (%)
국내 평균	11.45	9.47	149	8.75
해외 평균	7.55	4.31	27	4.36

주: 1) 국내평균은 25개 국내기업 실사치, 해외평균은 51개 해외현지법인 실사치.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1997)

나. 低效率의 經濟構造

- 經濟規模의 확대와 構造의 다양화에 따라 政府主導 經濟運營의 有效性이 급격히 低下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規制와 介入 위주의 政府主導 經濟運營이 持續되고 있어,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經濟의 效率性이 저하되고 있음.

-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規制緩和가 형식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추진실적이 자율화에 크게 未洽함.
 - 進入規制 등 주요 규제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음.
 - 94년도에 11,715건으로 집계되었던 총규제건수가 97년 8월에도 11,000건에 이르고 있음.

- 또한 進入制限 등 정부의 각종 競爭制限的 産業政策으로 기업들의 經營革新 노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 기업의 96년말 현재 自己資本比率은 24.0%로 일본의 32.6%, 미국의 37.5%, 대만의 53.4%에 비해 낮아 財務構造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임.

다. 金融實名制의 副作用

- 金融實名制가 金融去來에 대한 秘密保障과 稅務行政의 信賴性 측면에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시행되고, 資金出處調査 등의 위협적인 수단이 남용됨으로써 金融財產權에 대한 不確實性이 증대되어 經濟에 많은 副作用을 초래하고 있음.
- 國內金融機關 利用 忌避 및 資金의 海外搬出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資金市場의 경색으로 企業의 資金難이 심화됨.

- 오히려 實名化가 지연되어 實名制 대상 金融資産중 상당한 규모가 借名計座 또는 現金으로 남아있는 실정
- 貯蓄意慾이 저하되고 과도한 消費가 조장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貯蓄率이 하락하고 있음.(민간저축율 : 27.1%(92년) → 23.7%(96년))

라. 對内外 經濟環境變化에의 對應 未洽

- 情報·通信의 발달 및 WTO체제의 출범 등으로 世界經濟가 빠르게 통합되고 있어 世界市場에서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企業의 多國籍化가 심화되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방식이 기존의 國家間 競爭에서 企業間 競爭으로 변화하고 있음.
- 그러나 국내 經濟關聯 法規 및 制度가 國際基準에 크게 못미치고, 政府規制가 지속됨에 따라 企業經營環境이 惡化되고 있어 國際競爭力 향상에 장애가 되고 있음.

II. 政策目標와 새로운 패러다임

1. 政策目標

— 새政府는 21세기에 世界一流國家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國家競爭力 強化를 위해 다음의 8大 政策目標를 設定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함.

— 첫째, “經濟危機의 克服”

- 현재의 經濟危機를 극복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經濟改革의 持續과 構造調整 促進을 위한 經濟安定化 達成
- 賃金·勞使關係, 金融市場 개방 확대, 不實企業 및 不實 金融機關 조기 정리, 金融實名制 보완, 民間中心의 規制改革委員會 설치, 危機管理 經濟팀 運營 등의 부문에서 개혁을 추진함.

— 둘째, “작고 效率적인 政府”

- 재정이 效率적으로 運用되며 公平한 租稅가 부과되는 작고 效率적인 政府를 구현함.
- 行政, 民營化, 地方化, 財政 및 豫算, 租稅 및 稅政 등의 부문에서 개혁을 추진함.

— 셋째, “企業하기 좋은 經濟環境”

- 國民의 자유로운 經濟活動이 保障되고, 경쟁에 의해 창의와 혁신이 창출되는 企業하기 좋은 經濟與件을 造成함.
- 規制改革, 競爭促進政策, 土地, 金融 등의 부문에서 개혁을 추진함.

— 넷째, “成長潛在力 擴充을 위한 基盤造成”

- 높은 成長潛在力을 유지하기 위한 基盤構築
- 社會間接資本 擴充, 科學技術發展, 教育改革, 農業構造調整, 情報化 등의 부문에서 改革을 추진함.

— 다섯째, “삶의 質 向上을 위한 環境 및 社會保障制度 確立”

- 快適하고 豊饒로운 環境을 造成하고, 생산적인 福祉 및 醫療惠澤 擴大를 통해 삶의 질을 제고시킴.
- 環境 및 社會保障制度 등의 부문에서 개혁을 추진함.

— 여섯째, “經濟를 뒷받침하는 低費用 政治構造”

- 選舉制度 및 政黨構造를 개혁하고 政治資金을 양성화함으로써 低費用 政治構造를 構築함.
- 政治構造 및 政黨 2개 부문에서의 개혁을 추진하여야 함.

— 일곱째, “平和와 繁榮을 指向하는 南北關係 定立”

- 相互信賴 構築, 經濟·社會的 交流擴大, 對北 經濟開發 支援을 통해 韓半島 平和와 繁榮을 指向하는 南北關係를 定立함.
- 統一政策 및 南北韓間 民間交流 2개 정책과제를 추진하여야 함.

— 여덟째, “글로벌 體制에 副應하는 對外政策”

- 世界經濟秩序 형성에 적극 참여하고, 企業의 對外活動을 뒷받침하는 對外政策을 추진함.

2. 새로운 經濟運營의 틀

- 이상과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새정부는 “市場原理에 의한 經濟運營”과 “글로벌리제이션에 對應한 經濟運營”을 기본 틀로 設定하여야 함.

가. 市場原理에 의한 經濟運營

- 經濟規模 擴大와 글로벌리제이션 진전으로 인해 政府主導의 直接規制에 의한 經濟運營은 그 效率성이 限界에 이르렀으며 市場原理에 의한 資源配分機能이 활성화될 필요성이 증대함.
- 經濟運營의 구체적인 방식도 直接規制에서 間接規制로, 市場 및 企業의 行態規制에서 與件管理로, 近視眼的 對症療法에서 原因治癒로 轉換할 필요성이 대두됨.
- 差別的 法秩序, 制度와 規制, 慣行의 改革을 통해 맘흔린 만큼 正當한 보상을 받는 市場經濟 秩序를 정착시켜 經濟主體들의 經濟하려는 意志를 북돋아야 함.

나. 글로벌리제이션에 對應한 經濟運營 整備

-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國際規範 수용으로 法과 慣行이 國際基準과 일치하지 않아 世界經濟秩序의 흐름과 배치되어 글로벌리제이션에 對應한 體制整備의 필요성이 증대함.

- 國際規範의 積極的 受容과 國際機構에의 能動的 參與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여야 함.

- 攻擊的·能動的 通商外交를 펼쳐 기업의 해외활동에서의 애로를 해결하고 對外通商壓力에 적극 대처해야 함.

<丑>

Ⅲ. 새政府의 政策課題

1. 經濟危機 克服을 위한 緊急對策

賃金·勞使關係

- 향후 5년간 賃金上昇率을 總額基準 3%이내로 安定
 - 향후 5년간 賃金上昇率을 總額基準 3% 이내로 抑制
 - 새정부는 賃金안정의 필요성에 대한 社會的 合意 도출
- 健全한 勞使關係 정착
 - 勞組의 政治活動, 第3者介入문제에 있어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産業平和를 정착
- 「勤勞基準法」을 대체하는 「勤勞契約法」 制定
 - 市場需給 변화에 彈力的이며 다양한 雇傭契約이 가능하고, 노사의 자율성을 고양시키는 내용을 담은 「勤勞契約法」 제정

金融市場 開放 擴大

○ 金融市場의 開放擴大로 기업의 資金調達 圓滑化

- 會社債市場 開放擴大, 商業借款·現金 확대 등 기업의 海外資金調達 規制를 대폭 완화
- 5년 이상의 예금 및 채권에 대한 稅金減免을 통해 金融貯蓄을 증대시키고 長期資金 供給을 확대함.

不實企業 및 不實金融機關의 早期 整理

○ “企業의 構造調整 促進을 위한 特別法” 制定

- 總額出資制限, M&A規制 등 不實企業 정리에 障礙要因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特別法 制定을 통해 일괄 제거

○ 不實債權整理基金의 증액을 통한 金融機關의 債券 早期 整理

- 不實金融機關 정리를 위한 金融機關間 M&A 촉진
- 不實企業의 不動産 賣却 촉진

金融實名制 補完

- 金融實名制 代替立法을 통해 實名制 定着
- 金融去來에 대한 秘密保障 強化
- 地下資金의 陽性化를 위해서 實名轉換時 資金出處調査 廢止

民間中心의 “規制改革委員會”의 設置

- 經濟活力을 沮害하는 規制撤廢
 - 기업의 自律的 經營活動을 제한하는 각종 規制 廢止
 - 金融自律化 및 改革의 加速化
 - 民間專門家로 구성된 大統領 直屬의 “規制改革委員會”를 설치하여 改革을 본격적으로 추진

危機管理 經濟팀 運營

- 危機克服을 위해 政策實踐 意志가 分명한 經濟閣僚 選任
 - 빈번한 經濟閣僚 교체를 지양하여 政策의 一貫性 維持

2. 작고 效率的인 政府

行 政

가. 政府組織의 改編

問題點

- 우리나라의 政府組織은 지난 30 - 40년간의 政府主導 經濟開發體制下에서 中央集權的 性向이 심화되어 옴.
- 이러한 權限集中은 行政便宜主義的 行태로 인한 국민들의 權利 制約, 朝令暮改式 政策의 濫發에 따른 낭비와 혼란, 地域的 特殊性을 고려하지 않는 劃一的 政策施行 등 심각한 副作用을 초래하여 왔음.

政策方案

- 政策 立案機能과 執行機能을 分離하고, 執行機能중 民間이나 地方自治 團體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의 과감히 移讓.
 - 財政經濟院, 通商産業部 기능의 縮小調整 및 公報處 廢止.
 - 農林部, 中小企業廳, 調達廳, 建設交通部, 保健福祉部, 環境部 등의 業務에 대한 大幅的인 地方移讓과 民營化.
 - 內務부와 教育部 機能 縮小와 教育 및 警察行政의 地方化.
- 人事規定의 單純化, 運營豫算制度(running cost budget)의 導入 등을 통해서 人事·組織·豫算 등 권한을 각 부처와 관리자에게 대폭 委任.

나. 成果指向的 顧客滿足 行政의 具現

問題點

- 글로벌리제이션으로 인한 對內外 經濟環境의 急變으로 國家競爭力 向上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으며 국민들은 政府部門의 非效率性和 對應能力 不足을 批判하고 있음.
- 국민들은 公務員들이 더이상 ‘行政을 위한 行政’을 추구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고 정부가 수행하는 일의 價値를 따지고자 함.
- 이와 같은 여건 하에서 顧客滿足을 지향하는 企業家型 政府, 국민과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行政은 향후 정부의 존립을 위한 必須條件임.

政策方案

- 市民憲章(citizen's charter)등 顧客滿足을 위한 行政서비스기준 公表.
- 成果契約制度, 機關 및 個人單位 成果目標 設定과 實績評價를 근간으로 하는 成果管理體制(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도입.
- 使用者負擔金, 內部市場, 外注 등 市場機能을 導入하여 會計管理, 行政支援 등 公共 서비스 供給部門에서 經費節減과 品質向上 圖謀.
- 情報技術의 活用을 통한 現場中心의 業務處理方式 구현.
- 公務員 數를 줄이고 公務員의 處遇를 大幅改善.

다. 公務員의 停年制 廢止 및 契約雇傭制 導入

問題點

- 公務員組織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獨占的으로 生産되고 있음. 이와 같은 競爭의 缺如가 公共部門 또는 政府部門 非效率性의 原因임.
- 우리나라 行政에서 競爭原理은 度外視되거나 意도적으로 回避되어 왔으며 國民의 지나친 衡平意識도 競爭回避의 한 原因으로 작용함.

政策方案

- 權限의 分權化, 民營化와 規制改革을 통한 競爭原理의 導入 및 政府權力의 縮小 추구.
- 年功序列 爲主의 人事, 停年制 등 職業公務員制度의 전면적인 改編.
- 고위 공무원직의 契約制 및 公開競爭 採用制度 시행을 골자로 한 公務員任用制度 再編.

라. 中央政府의 政策企劃能力 強化

政策方案

- 中央政府의 專門的 力量과 革新的 思考는 改革成功의 필수적 요인임.
- 政治的으로 可能하면서도 果敢한 改革이 最小의 費用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政策企劃能力 提高.

- 財政經濟院의 機能再編과 縮小, 大統領秘書室 기능의 再調整과 組織改編, 行政改革·規制改革·民營化 促進을 위한 政府組織 改編.

民營化

가. 公企業 民營化 推進體系의 改善

問題點

— 民營化 推進의 不進의 原因

- 選出職 公職者들의 政治的 目的에 의한 民營化 計劃의 恣意的인 變更.
- 公務員의 民營化推進體系에 대한 獨占.
- 民營化 方式의 最適配合 失敗로 인한 利益集團들의 反撥.

政策方案

— 「民營化促進特別法」의 제정.

- 「公企業의 經營構造 改善 및 民營化에 관한 法律」 廢棄.
- 民營化推進委員會 設置, 民營化 參加資格 制限 禁止, 실질적 經營권이 양 수준까지의 株式賣却, 持分制限 廢止, 公益産業委員會 設置.

나. 주요 公益産業의 民營化

政策方案

- 네트워크 公益産業의 경제적인 비중은 대단히 크고 이들 산업에서의 經濟的 效率性 提高는 國民經濟에 대한 영향이 지대함.
- 이 산업들에서의 「國家所有+獨占+規制」의 産業構造가 초래하는 根源的 非效率性 解消를 위해서 民營化와 競爭導入이 최선임.
 - 電氣, 通信, 가스, 水道, 鐵道 산업의 垂直的 統合 狀態를 分離하여 競爭狀態 造成.
 - 進入規制 廢止와 네트워크 接續開放을 통한 競爭促進.

다. 公益産業委員會 設置

問題點

- 主要 公益産業의 非效率性은 政府가 所有·經營·規制 등 相互 相衝되는 役割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발생하고 있음.

政策方案

- 公益産業委員會를 設立하여 정부 각 소관부서들과 通信委員會 등의 規制機能을 統合함으로써 네트워크 産業 規制의 專門성과 效率性 提高.
- 規制된 公益産業들에 대한 競爭導入 方案 마련.

地方化

가. 企業型 地方行政의 具現

政策方案

- 行政의 效率性 提高를 위해서 豫算·人力·資金·公共施設 管理의 效率化, 組織·機構의 능률적인 운영 등이 주요과제임.
- 지방정부 豫算의 地域戰略産業 集中投資.
- 地方政府의 事務再配分을 통한 불필요한 事務와 事業 整理.
- 地方行政業務의 公社化, 民營化, 外注 등을 통한 效率化.

나. 地方政府의 企業誘致 競爭誘導

政策方案

- 地方政府間 競爭의 擴大는 企業投資 誘致競爭을 深化시키고 있음.
- 地方政府의 行政서비스와 각종 稅制·立地에 대한 支援은 이러한 競爭을 이기기 위한 前提條件임.
- 企業誘致條例의 制定, 企業誘致推進機構의 設立, 生産서비스지구 造成.
- 創業節次의 簡素化, 外國人投資 認可節次의 簡素化, 首都圈 都市型業種의 新·增設 緩和 등 行政規制 및 節次의 簡素化를 통한 企業誘致 競爭 유도.

다. 地域開發의 地方主導

政策方案

- 民間企業의 自律經營 擴大를 통해서 地域産業 및 經濟의 活性化 圖謀와 地方政府 主導의 地域開發政策 追求.
- 創業保育센터 설치, 研究開發·情報센터·財政支援 및 管理·業務지원 기능 등에 대한 地方政府의 自律性 保障으로 기업들의 수요 충족.

라. 企業型 地方財政 運營

政策方案

- 地方政府 自體收入 擴大 및 中央의 財政支援 強化를 통한 地方財政 擴充과 地方財政 運營의 健實化가 地方自治 성공의 필수요건임.
- 불필요한 사업에의 投資, 무계획한 豫算配定 등에 따른 財政의 浪費와 損失을 막기 위해 關聯制度 改善 필요.
- 中期地方財政計劃制度의 計劃期間 短縮 및 運營 伸縮性 제고.
- 地方事業 投融資 審査對象 規模의 上向調整을 통한 실효성있는 投融資 審査.
- 地方財政運營改善法律을 制定하여 재정운영이 불건전한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制裁 및 財政運營改善 圖謀.

財政 및 豫算

가. 民間企業式 發生主義 會計制度 導入

問題點

- 現行 豫算制度는 정부의 각종 사업 및 정책에 따른 產出物 生産費用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우며 硬直性和 非效率性을 가지고 있음.

政策方案

- 發生主義 會計方式 導入을 통해 政府活動의 損益에 대한 正確한 測定과 예산집행의 透明性 提高.

나. 98개에 이르는 각종 特別會計 및 基金의 統廢合 및 整備

問題點

- 정부는 一般會計에 버금가는 特別會計와 基金을 가지고 追加的인 財政 活動을 수행하고 있음.
- 1997년의 豫算規模는 71조 4천억원으로 國民總生産 대비 16.3% 수준에 이르지만 22개 特別회계 및 76개 기금의 運用規模가 11조 9천억에 달하고 있음.

政策方案

- 産業基盤基金과 中小企業創業支援 및 振興基金 등의 統廢合을 통한 中小企業支援의 一元化를 도모.
- 職業訓練基金, 雇傭保險基金, 技能獎勵基金 등의 勞動部 關聯 各種 基金을 整備.
- 交通安全基金과 道路交通安全協會基金을 統廢合하여 交通事故 豫防과 安全事業을 統合調整.
- 農林水産業 財政支援體系(7개 基金, 6개 特別會計 등)의 統合을 통한 單純化.

다. 豫算限度 裁量 附與 및 效率配當制 適用

政策方案

- 經常費豫算 한도내에서 각 부처에 裁量權을 부여하는 經常費運營原則 (running cost arrangement)과 效率配當制(efficiency dividend) 등을 통해 財政 運營의 效率化와 經常費 節減 方案 마련.
- 多年度 豫算編成의 原則 하에 經常費 豫算의 前·後方 移越制度를 導入·強化하여 豫算運營의 伸縮性 提高.

租稅 및 稅政

가. 租稅體系의 單純化

問題點

- 現行 稅制은 복잡한 減免制度, 다양한 課稅對象, 비현실적인 資產評價, 난해한 課稅標準과 稅額算出方法 등으로 정확한 稅額計算조차 어려움.

政策方案

- 法人稅率을 法人種類나 利益規模에 관계없이 單一化하고 相續稅 累進率을 大幅 緩和.
- 稅收가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附加稅(교육세, 교통세, 농어촌 특별세)를 本稅(소득세, 법인세)에 統合.
- 中央政府와 地方政府間 稅源 및 稅收分配 基準 改善.
- 經濟發展 段階에 맞게 特別消費稅 稅率·品目을 合理的으로 調整.

나. 國際規範에 맞는 租稅支援制度

問題點

- 中小企業에 대한 租稅支援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의해 대부분 어려워졌음.

政策方案

- 기존의 中小企業 稅制支援과 政策金融은 撤廢하고 資金의 可用性 增大와 信用保證 擴大를 통해 企業의 競爭與件 造成에 주력해야 함.
- 投資稅額減免制度의 國產優待條項 廢止.

다. 稅政의 改善

政策方案

- 稅務當局이 個人情報를 不當하게 流用하거나 公開하는 것으로부터 納稅者를 保護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 마련.
- 정당한 稅務計劃에 의한 節稅權 保障.
- 각종 減免과 控除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稅務官署의 助力을 받을 權利 保障.
- 세무관련 行政審判의 公正·迅速한 運營을 통해서 稅務當局의 부당한 조치로부터의 迅速한 救濟 保障.

3. 企業하기 좋은 經濟環境

規制改革

가. 規制改革 推進體系 改善

問題點

- 規制改革 推進體系에 대한 公務員들의 獨占과 規制改革 推進 主體인 각 委員會들의 權限과 專門性 缺如가 規制改革 未盡의 큰 原因임.

政策方案

- 行政規制基本法에 따른 規制改革推進機構의 조속한 설치.
 - 행정 각 부처에 대한 羈束力, 規制改革 對象課題의 發掘·選定權, 規制改廢過程에 대한 監督權, 新設規制에 대한 事前審查權, 既存規制에 대한 存續與否 判定權이 부여된 規制改革委員會의 設置.
 - 기존의 規制改革 推進 委員會들을 이 規制改革推進機構로 統·廢合.
- 規制改革 관련 利益集團들의 意見收斂裝置 마련.
- 規制改革 關聯情報의 定期的 公開 義務化.

나. 政策的 規制의 改革

問題點

- 現정부의 規制緩和는 行政節次의 簡素化나 用語의 透明性 提高에 注重하여 각종 政策的 規制에서 발생하는 歪曲效果를 시정하지 못하고 있음.

政策方案

- 競爭을 制限하는 政策的 規制의 改革 推進.
 - 經濟力集中抑制策 中 競爭制限의 規制의 廢止.
 - 物價安定政策의 手段으로 사용되어온 價格規制의 廢止.
 - 通貨管理政策上의 直接規制方式을 間接規制方式으로 轉換.
 - 首都圈 集中抑制, 그린벨트, 農地關聯 政策 등 土地利用規制에 대한 대폭 緩和.
 - 農産物價格支持, 消費者保護, 中小企業育成 등 特定階層에 대한 保護 및 支持를 위한 規制政策 廢止.

다. 法令上의 違憲性 條項 廢止

問題點

- 현재의 法令들은 憲法에 명시된 基本權의 精神에 違背되는 條項들을 통해서 個人의 所有權과 企業의 活動을 制約하고 있음.
- 또한 法令에 근거하지 않은 각종 行政規制들이 經濟活動을 制約하여 經濟的 效率性を 沮害하고 있음.

政策方案

- 각종 法令上의 違憲性 條項의 廢止.
 - 債務保證制限, 系列企業間 相互去來制限, 大規模企業集團의 指定 등 基本權 制限的 公正去來法 條項들의 廢止.
 - 하도급법, 銀行法, 證券去來法 等에서의 違憲性 條項들의 廢止.
 - 不動產讓渡所得稅制, 法人稅法上의 非業務用 不動產 課稅, 所得處分制度 등 稅法上의 違憲性 條項들의 廢止.

- 上位法令에 구체적 근거를 가지지 않은 告示·訓令·例規·通牒 등 각종 行政規制들의 一括 廢止.

競爭促進 政策

가. 經濟力集中抑制政策의 競爭政策으로의 轉換

問題點

- 우리나라의 公正去來政策은 소위 經濟力集中 抑制라는 目標을 달성하기 위해 所有分散, 業種專門化 등 여러 政策目標을 一貫性 없이 추구하여 왔음.
- 이러한 政策混線은 經濟力集中의 여러 측면중 市場競爭에 의해 矯正되어야 할 부분과 政策을 통해 矯正되어야 할 부분을 구분하지 못한 데 기인함.

政策方案

- 향후 開放經濟體制로의 進入이 加速化될 것인 바 大企業關聯 政策의 초점은 企業集團의 크기에 관계없이 각 기업들이 公正한 競爭環境을 造成하는 데 두어져야 함.
- 따라서 市場開放을 가속화하고 競爭制限的 政策과 制度를 廢止함으로써 企業間의 公正競爭을 誘導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함.

나. 大規模 企業集團 指定制度의 廢止

問題點

- 現행 公正去來法은 기업의 外形的 規模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위 30대 企業집단을 指定하고 出資 및 支給保證을 規制하는 差別的 規制를 하고 있음.
- 그러나 향후 國內企業集團間 順位는 의미가 없어질 것이며 企業規模의 격차가 큰 30大 企業集團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일률적으로 規制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規模가 작은 企業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뿐 아니라 競爭을 制限할 수 있음.

政策方案

- 따라서 企業集團指定制度를 廢止하거나 上位 5大 企業集團으로 指定對象을 縮小해야 함.

다. 固有業種制度·隨意契約制度 등 競爭制限의 政策의 廢止

問題點

- 國際貿易機構(WTO) 출범으로 國內市場에 대한 開放要求가 거세어지고 있고 中小企業도 國內의 市場에서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음.
- 정부의 競爭制限의 中小企業政策으로 中小企業의 競爭力 培養機會가 制限되고, 競爭力은 떨어지는 逆說이 발생하고 있음.
- 안경테, 유아용승용물 등 中小企業 固有業種 品目の 競爭力이 떨어지고 있으며, 國內市場 開放으로 外國企業의 固有業種 參與는 許容되는 반면 國內大企業의 參與는 禁止되고 있는 실정임.

政策方案

- 中小企業의 事業領域을 사전적으로 지정하는 固有業種制度나 中小企業間 競爭을 제한하는 團體隨意契約制度和 같은 競爭制限制度 廢止.

라. 市場競爭原理 作動을 위한 基本 인프라 構築

問題點

- 市場經濟의 基本原理는 革新的이고 效率的인 企業은 持續적으로 成長하고 非效率的인 企業은 市場에서 淘汰되는 것임.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企業의 成果가 市場에서 제대로 測定·評價되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市場을 통한 企業의 進入, 成長, 退出이 容易하지 않음.

政策方案

- 따라서 企業의 效率性이 市場에서 정확히 評價될 수 있는 制度的 裝置 整備 필요.
- 企業內部監視制度, 金融機關의 企業 監視機能 強化.
- 企業會計制度和 外部監査制度 및 公示制度의 透明性 提高.

벤처企業의 活性化

가. 中小벤처企業에 대한 支援擴大와 規制緩和

政策方案

- 최근의 科學技術 발달과 情報化 급진전은 知識·技術集約的 産業의 成長 潛在力이 대단히 클 것임을 예고하고 있음.
- 競爭力 強化를 위해 技術력 있는 벤처中小企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
- 技術개발 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 업역에 대한 規制 廢止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創業投資會社가 투자할 수 있도록 許容.

나. 大企業의 벤처企業 投資 活性化

政策方案

- 大企業의 人力·資本·技術·마케팅能力·經營노하우를 活用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大企業의 벤처企業 投資規制 緩和.
-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유도를 위한 大企業의 벤처企業 出資限度 例外 認定.
- 자본을 소유한 大企業과 기술을 보유한 中小企業이 제휴한 조인트 벤처 결성 촉진책 마련.

土 地

가. 土地利用規制 효과를 통한 土地供給의 擴大

問題點

- 우리나라는 土地價格이 매우 높는데 이는 都市用 土地의 供給이 심한 制約을 받고 있기 때문임.
- 1996년 현재, 전국 土地面積의 15%에 불과한 6대 광역시와 경기도 지역의 土地價格總額은 879조원으로서 전국 土地價格總額의 72%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고지가의 원인이 도시토지 공급의 부족에 기인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임.

政策方案

- 開發制限區域(그린벨트 등), 農業振興地域 및 首都圈 集中抑制策 등을 조정하여 都市用 土地를 2배이상(30억평)으로 확대.

나. 土地利用規制權의 地方政府 移管

政策方案

- 土地關聯 規制權의 地方政府 移管에 의해 각 지방 실정에 맞는 土地利用規制 施行.
 - 農地 및 林野의 專用 規制, 都市用地 사용 관련 規制 등에 대한 中央政府의 개입 大幅 縮小.

다. 不動產投資信託制度 導入

政策方案

- 증권과는 달리 土地價格의 上昇이 社會的 不滿으로 表출되는 것은 價格上昇의 利得이 特定階層에 制限的으로 配分되기 때문임.
- 土地에 대한 投資(또는 投機)를 주업으로 하는 不動產投資信託會社를 설립하여 一般投資者의 자유로운 投資許容.

라. 首都圈 規制 廢止

政策方案

- 都市에 集中된 人口는 分業과 專門化를 促進해서 生産性을 높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首都圈人口集中 問題도 같은 시각에서 파악해야 함.
- 制限된 地域으로의 人口集中이 混雜, 公害, 犯罪率의 增加와 같은 副作用들을 빚어내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人口集中 자체를 막기 보다는 그 부작용들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임.
- 中央政府에 의한 首都圈集中抑制策을 廢止하고 地方政府들이 스스로 대도시 문제의 해결책을 찾도록 해야 함.

마. 投機抑制策의 廢止

問題點

- 投機抑制策은 高地價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입되었으므로 土地供給이 증가하여 土地價格이 하락하면 投機抑制策의 명분도 사라질 것임.
- 지금까지 投機抑制策들은 土地價格을 낮추기 보다는 低密度-早期開發, 賃貸用 住宅의 供給抑制 등과 같은 부작용만을 초래한 것으로 보여짐.

政策方案

- 土地供給의 擴大와 並行한 投機抑制策들의 廢止.

金 融

가. 銀行 所有構造에 대한 規制 緩和

問題點

- 銀行産業에서 責任經營體制 未確立은 우리 金融産業의 落後性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현재 은행주식의 동일인 보유한도는 시중은행 4%, 전환은행 8%, 지방은행 15%이며, 금개위안은 시중은행, 전환은행 및 합작은행은 4%, 지방은행은 15%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政策方案

- 따라서 大株主의 經營監視機能을 제고하고 銀行의 責任經營體制 확립을 촉진하고, 양질의 資本을 조달할 수 있는 金融企業家가 銀行業에 進入할 수 있도록 銀行 所有構造에 대한 規制가 緩和되어야 함.
- 大株主의 銀行經營에 대한 參與를 유도하기 위해 銀行株式 同一人 保有限度を 점진적으로 擴大하고, 시중은행, 전환은행 및 합작은행에 대한 保有限度を 統一하며, 所有持분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株主權을 인정해야 함.

나. 責任經營體制 確立을 위한 銀行 非常任理事制度 改編

問題點

- 현재 銀行의 非常任理事는 持分比率 순으로 선임된 大株主代表와 小株主代表 및 金融專門家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5大 企業集團의 이사회 참여는 허용되지 않음.
- 그러나 적극적으로 經營을 監視할 동기와 능력을 가진 大株主代表의 비중이 작고 5大 企業集團이 배제되어 있어 非常任理事會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政策方案

- 非常任理事 구성을 大株主 위주로 개선하고 非常任理事會에 5大 企業集團을 참여하게 하여 責任經營體制 확립 유도.

다. 金融機關의 進入規制 緩和

問題點

- 金融機關의 進入規制 및 業務領域 規制는 金融市場에서의 公正競爭을 制限하여 金融仲介의 非效率性을 초래하고 있음.

政策方案

- 金融機關 新規設立을 위한 最低資本金 基準의 下向調整 등 進入規制

- 를 緩和하고, 現行 許可制를 準則主義로 전환하여 경쟁을 촉진.
- 金融機關의 兼業擴大를 위해 金融持主會社 설립 許容.

라. 直接金融市場에서의 規制 緩和 및 撤廢

問題點

- 株式發行規制, 會社債發行規制 등 政府의 直接金融市場에 대한 介入은 市場의 健全한 發展을 阻害하고 기업의 資金調達에 있어 隘路要因이 되고 있음.

政策方案

- 企業公開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有償增資의 配當要件 및 限度制限 撤廢.
- 會社債 起債調整制度 廢止.

마. 官治金融 撤廢

問題點

- 政府主導的 金融制度 하에서 政府의 介入手段으로 이용되어 온 各種 金融規制는 結果적으로 金融機關의 創意性과 競爭風土 定着을 가로막아 金融産業의 發展을 저해하고 있음.

政策方案

- 銀行 및 投信社 등 金融機關 人事에 대한 政府介入 撤廢.
- 金融機關 資産運用에 대한 規制(국공채 의무편입비율, 중소기업 의무 지원, 산업지원금융 등) 폐지.
- 産業銀行 등 政府出捐 金融機關 民營化.

4. 成長 潛在力 擴充을 위한 基盤造成

社會間接資本

가. 民資誘致制度的 實效性 提高

問題點

- 1995년 현재 우리나라의 物流費는 國內총생산의 16.5%를 차지하여 미국과 일본의 7~8%에 비해 2배나 높은 수준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社會間接資本投資는 지지부진한 형편임.
- 지난 1994년 “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 民間資本誘致促進法”이 제정된 이후 모두 40개 사업이 대규모 民資誘致對象으로 선정되었으나 지금까지 착공된 사업은 겨우 5개로 民資誘致 實績이 극히 저조함.

政策方案

- 社會間接資本에 참여하는 기업에 海外資金 調達機會의 擴大.
- 施設使用期間 및 附帶施設運營에 대한 收益性 규제 철폐.
- 民資誘致事業은 설계·시공 一括施行方式(턴키방식)을 통해 맡주한다는 節次上的 原則을 確立할 필요가 있음.

나. 東北亞 中心港灣 構築

問題點

- 2000년대 世界經濟의 中心地는 東北아시아가 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 역내 국가간 東北亞 物流基地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 그러나 가덕항 건설은 계획자체가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政治的인 論理에 의하여 서둘러 수립되어 공기가 相當期間 遲延되거나 規模가 縮小될 可能性도 배제할 수 없음.

政策方案

- 따라서 가덕항을 착공하기 이전에 “부산·광양의 Two-Port System 구축을 위한 장기종합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양 항만의 구축이 서로의 投資 및 經營戰略을 制約하거나 政治的인 論理에 의해 變質될 可能性을 最小化해야 할 것임.
- 가덕항 건설을 계기로 港灣의 建設·運營을 정부주도에서 民間主導로 轉換해야 함.

다. 綜合物流情報網의 構築

問題點

- 高物流費用은 道路·港灣·鐵道 등의 物流基盤施設이 絶대적으로 부

족하다는 점뿐만 아니라 物流情報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綜合物流情報網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우리의 현실은 企業 및 機關이 獨自적으로 自體 物流情報網을 구축하기 때문에 정보망 사이에 資料의 互換성이 없음.
- 해운항만청을 KLNET 및 PORT-MIS(항만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함.
- 관세청은 KTNET를 구축함.
- 그러나 KLNET와 KTNET간의 자료호환성이 없음.

政策方案

- 현재 기관별로 獨自적으로 추진중인 航空, 海上, 鐵道, 道路情報網을 標準화된 複合連繫體系로 統合하여 綜合적인 物流情報網을 構築하고 나아가 이에 貿易, 金融情報網 등 有關情報網을 連繫하여 일괄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科學技術

가. 科學技術處를 技術革新部로 改編

政策方案

- 技術開發과 관련하여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技術下部基盤의 擴充, 科學技術人力の 養成, 競爭的 科學技術 支援體制的 擴充 등임.

- 科學技術政策의 一貫性 유지 및 部處間 業務領域 調整을 통해 科學技術投資의 效率性을 높여야 함.
- 현재의 科學技術處와 教育部의 大學教育 關聯部暑를 統廢合하여 技術革新部로 개편하여 科學技術의 획기적 발전을 一貫性 있게 지원해야 함.

나. 委託研究 競爭入札制 導入

政策方案

- 大學이 博士級의 고급 人力資源을 확충하고, 民間研究所의 양적인 팽창이 이루어짐으로써 政府出捐研究所의 役割 再定立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政府委託 研究에 대한 競爭入札 방식을 도입하여 民間企業, 大學, 政府出捐研究機關間的 競爭을 통해 政府出捐研究機關의 效率性 및 專門化를 제고해야 함.

다. 基礎研究 投資集中制 導入

問題點

- 基礎科學은 不確實性이 높고 市場機構에 의한 適正投資가 어려워 정부가 지원해야 할 영역중 하나이나 정책 당국자의 基礎科學研究에 대한 의지부족으로 基礎科學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政策方案

- 『科學技術革新을 위한 特別法』을 制定하고, 政府研究開發 예산이 政府 總豫算의 5%가 되도록 明示함으로써 研究開發投資를 劃期的으로 增大시켜야 함.

라. 特許行政 情報化 및 機能效率化

政策方案

- 技術發展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産業財産權을 빠른 시간안에 심사하여 技術開發者에게 그 권리를 인정해 주는 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 外部專門家 審査諮問制度의 활성화와 特許審査專門人力을 획기적으로 보장하여 特許審査의 질적인 수준향상 및 審査期間 단축 도모.
- 特許技術情報의 電算化를 통한 産業財産權 管理의 강화.

마. 사이언스파크 造成과 技術保護 強化

政策方案

- 사이언스파크는 大學과 企業을 連結함으로써 産·學間의 技術協力 및 技術擴散에 크게 기여함.
- 産·學協同을 통해 技術擴散을 촉진하기 위해서 대학의 노력은 물론 科學公園의 조성이 필요함.
-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벤처企業의 창업을 쉽게 하거나 場外株式市場活性化, 기술을 담보로 한 資金貸出이 용이해지도록 하는 制度整備가 필요함.

教 育

가. 政府干涉의 排除를 통한 大學間의 競爭 促進

問題點

- 가까운 장래에 高等教育의 超過供給이 예상됨에 따라 각 大學은 현재 생존차원에서 나름대로 特性化·多樣化를 추진하지 않으면 도태될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 그러나 政府의 大學政策은 市場機能을 制限하여 大學間의 競爭을 가로막고 있음.

政策方案

- 大學政策室 등 教育部의 大學關聯部署 廢止.
- 寄與入學制, 登錄金 自律化 및 入學定員 自律化 등 大學政策에 관해 大學의 自律權 부여.
- 大學評價委員會(가칭)를 신설하여 大學에 대한 公正한 評價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함.

나. 初·中等教育의 需要者 中心 教育體制로 轉換

問題點

- 課外市場의 확대는 公教育이 失敗하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이는 교육 서비스를 국가가 통제 조정함으로써 教育서비스 市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임.

政策方案

- 公教育의 自律性を 확대하여 教育市場에서 競爭을 促進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學群制 등 각종 規制를 廢止하고 支拂保證(voucher)제도 등과 같이 競爭을 促進하는 제도 도입.
 - 學群制 廢止 및 지불보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學生의 學校 選擇權 附與.
 - 學校運營委員會의 活性化를 통한 학교자치로 학생유치 경쟁을 가속화시켜 교육의 질 향상 및 다양성 구현.

다. 教育豫算의 職業·技術教育에의 集中 投資

問題點

- 향후 知識集約的 經濟에서는 지식과 기능을 고루 갖춘 技術者를 필요로 함.

- 그러나 學歷爲主의 우리 풍토 하에서 현 職業・技術教育은 이류 또는 한계 교육으로 인식되고 있어 技術者 排出에 한계가 있음.
- 또한 教育裝備의 老後化・落後化로 급속히 변화하는 産業現場에 適應할 수 있는 技術者를 배출할 수 없음.

政策方案

- 매년 教育豫算의 일정 부분을 지속적으로 投資하여 노후화되고 낙후된 職業・技術教育裝備를 現代化하고 職業・技術教育을 活性化하기 위하여 장학금 擴大 및 등록금 減免을 통하여 우수 인력유치.
- 학력과 互換性이 있는 資格證 制度의 도입.

農業部門

가. 42조원의 構造改善事業 및 15조원의 農漁村特別稅 支援事業과 같은 投融資事業의 再檢討

問題點

- 1995년 현재 農漁業部門豫算은 전체 예산의 14.2%를 차지(1992년 8.9%)하고 있으나 國民總生産대비 기여는 6.6%(1992년 7.7%)에 불과한 실정임.

政策方案

- 따라서 42조원의 構造改善事業 및 15조원의 農漁村特別稅 支援事業 등 農業投融資事業의 縮小와 效率的 運營 圖謀.

나. 經濟 作物 中心의 農業 構造調整

問題點

- 政府의 農業構造調整事業은 米穀에 초점을 두고 전개되고 있음.

政策方案

- 用途別 農地利用 추이와 消費패턴의 變化, 外國 農産物과의 競爭可能性 등을 고려해 볼 때 쌀생산 專業農 育成 爲主의 農村支援制度는 再考되어야 함.
- 耕地規模가 적은 우리나라의 農業與件下에서는 商業性에 입각하여 尖端技術을 이용한 土地節約型·技術集約型 농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다. 農産物 流通體系에 競爭導入

問題點

- 產地流通, 都賣流通, 小賣流通 段階에서 발생하는 買占賣惜, 不公正 價格 등으로 인해 消費者의 支拂價格은 높은 데 반해 生産者의 受取價格은 지나치게 낮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政策方案

- 流通構造의 獨寡占化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流通業에 대한 進入 障壁을 제거해야 함. 특히 政府主導의 流通體系 整備方式에서 脫피하 여 民間資本에 의한 新流通 業態의 市場進入을 活性化 할 需要가 있음.

라. 農産物 流通情報 시스템의 擴充

問題點

- 商業的 農業의 進進으로 流通情報의 重要性은 더욱 증대하고 있는 반면 현재의 政府主導型 流通情報網은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

政策方案

- 政府는 商業性 위주의 作物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生産與件 情報體系 이외에도 消費者의 嗜好 및 流通網 등에 관한 情報體系를 구 비해야 함.
- 특히 情報化事業은 상당한 資金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民間資本 誘致를 통해 재정부담을 줄일 需要가 있음.

마. 法定都賣市場 擴充에 民間資本 參與

政策方案

- 都賣流通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法定都賣市場을 건립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금 동원력이 있는 民間資本의 誘致를 통해 財政의 부담을 덜 필요가 있음.
- 都賣去來 經營체인 指定都賣法人의 資本이나 經營에도 일반 民間法人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바. 業協同組合의 經濟事業 活性化

問題點

- 經濟事業은 協同組合의 설립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基本事業으로 信用事業에 비해 경제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사업이 낙후되어 있음.

政策方案

- 協同組合의 經濟事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사업 부문의 만성적인 赤字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임.
- 經濟事業의 財源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금소요가 많은 사업의 경우 民間資本의 參與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情報化

가. 電子政府(electronic government)의 具現

問題點

- 美國 등 先進國은 情報技術을 政府部門에 도입함으로써 行政領域에서 情報技術을 이용한 電子政府를 실현하려고 노력해 왔음.
- 우리나라는 1970년대 말부터 行政電算化計劃을 수립하여 주요 행정업무를 電算化하는데 노력하여 왔으나 아직도 政府部門의 情報化는 낮은 수준임.

政策方案

- 行政府內 각 부처의 情報시스템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은 물론 立法部, 司法府의 情報시스템까지도 단일한 창구를 통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政府綜合情報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나. 超高速通信網의 早期構築

問題點

- 情報通信이 國家競爭力을 결정하는 새로운 社會間接資本으로 대두됨에 따라 世界 各國은 경쟁적으로 情報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超高速情報通信網 구축의 시발시점이나 情報化 基盤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실정임.

政策方案

- 우리나라가 超高速通信網 구축사업을 통해 선진국과의 情報化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2010년까지 구축하기로 되어 있는 加入者 超高速情報通信網 事業을 2005년도까지로 앞당겨야 할 것임.

다. 情報化 關聯 法制度의 整備

問題點

- 우리나라는 情報化의 有用性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인식이 미흡하고 또 情報化時代 이전의 제도와 관행에 익숙해져 있어 情報通信을 이용한 構造改革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政策方案

- 知識産業 育成을 위한 知的財産權制度의 改善, 電子商去來를 活性化하고 電子資金移替의 安全性을 確保하기 위한 加緊 電子商去來基本法 制定 등을 서둘러야 함.

라. 情報化 人力의 育成

政策方案

- 향후 소프트웨어 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創意的인 開發能力을 갖춘 高級人力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임.
- 情報通信大學院 및 테크노 MBA 등에 인력을 과건하는 海外獎學事業을 통해 國際的인 感覺을 갖춘 專門人力을 養成하는 것이 필요함.

마. 소프트웨어 벤처産業 育成

問題點

- 우리나라는 아직 情報通信産業의 주된 기반이 하드웨어에 치중하고 있음. 향후 소프트웨어 산업은 높은 成長과 높은 附加價値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나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産業基盤은 매우 취약한 실정임.

政策方案

-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내외 첨단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最適의 環境에서 研究 및 製品開發을 할 수 있는 國際的인 멀티미디어 研究開發 團地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制度整備가 요구됨.
- 知的所有權에 대한 法律과 制度를 國際的 基準에 맞도록 정비하여 소프트웨어 산업 등 知的所有權 관련 산업의 발전과 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해야 함.

바. 通信産業의 競爭促進

問題點

- 情報通信部는 아직도 “通信産業”을 자신들이 서비스供給을 직접 책임지는 固有産業으로 인식함.
- 政府는 進入, 營業分野, 營業方式, 裝備調達, 料金水準, 接續料, 기타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主要意思決定을 하고 企業들은 단지 執行할 뿐이라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음.

政策方案

- 通信産業은 利潤動機에 입각한 民間企業의 競爭에 맡기고 政府는 競爭環境을 保障하는 間接的 役割을 해야 함.

5. 삶의 질 向上을 위한 環境 및 社會保障制度 確立

環 境

가. 市場經濟 原理에 맞는 環境規制로 轉換

問題點

- 汚染物質의 濃度排出規制는 排出量에 관계없이 濃度만을 測定함으로써 汚染物質의 總排出量을 파악하기 어려움.

政策方案

- 濃度排出規制에서 排出總量制度로 전환해야 함.
- 또한 企業體別로 汚染物質의 排出許容量을 設定하여 이보다 排出量을 줄인 기업에 대해서는 나머지 排出許容量을 다른 기업이나 地自體에 판매할 수 있는 汚染物質 排出權 去來制度를 도입함.

나. 環境親和的인 에너지 및 公共料金 價格體系 導入

問題點

- 기존의 에너지 價格體系는 大氣汚染에 미치는 影響을 감안하고 있지 않음. 가령 경유를 연소할 때 배출되는 아황산가스의 양은 淸淨燃料에

비해 훨씬 많은 汚染物質을 排出하는데도 에너지 가격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함.

- 또한 현재의 上下水道 料金體系(수도물 1톤당 요금: 275원, 하수처리요금: 82원)가 生産原價(수도물 1톤당:375원) 및 處理費用(하수처리:186원)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

政策方案

- 汚染物質 誘發費用의 原因者負擔 原則 및 上下水道 料金の 現實化 등을 통해 環境保存을 위한 經濟的 인센티브 제공

다. 民間資本 參與를 통한 基礎環境施設 擴充

問題點

- 현재 公共部門의 環境基礎施設 건설과 운영은 運營人力 過多로 인한 人件費의 過多支出, 運營管理要員의 專門性 不足, 運營管理費의 過多支出 등 非效率性이 지적되고 있음.
- 民間에 의한 運營이 상대적으로 效率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98개의 基礎施設중 民間이 운영하고 있는 곳은 11군데 정도에 불과함.

政策方案

- 民間資本의 參與가 보다 積極的으로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함.

社會保障制度

가. 社會保險의 民間競爭體制 導入

問題點

- 社會保險制度(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는 핵심적인 社會保障制度로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다루어져야 하나 현재 財政安定性, 制度間 衡平性 및 連繫性 不足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됨.

政策方案

- 公的年金에 대한 政策(각출료, 지급연령 등)은 中央政府가 담당하더라도 年金基金 運營은 民間 競爭體制를 導入하여 효율성을 도모해야 함. 특히 國民年金은 「公共基金管理基本法」의 資產運營規則 適用對象에서 제외해야 함.

나. 被保險者의 醫療保險 選擇權 附與

問題點

- 醫療保險制度는 철저한 衡平性 원리에 기초하여 低保險料, 低醫療酬價 등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 醫療서비스의 需給 및 價格體系가 市場原理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衡平性이 강조된 社會保險으로 출발한 醫療保險制度는 衡平性도 살리지 못하고 效率性만 포기한 기형적인 제도로 운영됨.

政策方案

- 醫療서비스 供給者의 競爭을 誘導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본적 보험 이외에는 消費者가 必要에 의해 選擇할 수 있는 새로운 醫療保險體系, 民間醫療保險 또는 基本保險에 추가되는 사양 선택권을 부여함.

6. 經濟를 뒷받침하는 低費用 政治構造

가. 高費用 政治構造의 打破

問題點

- 韓國政治의 高費用 構造는 한번 大統領選舉를 치루는 데 1조원이란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동원될 정도로 그 문제가 심각함.
- 돈에 의한 정치는 利益集團의 專橫, 制度圈 政治에 대한 不信, 國家競爭力 弱화 등 많은 정치·경제적 문제를 야기함.

政策方案

- 高費用 政治構造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우선 遊說場 聽衆動員, 弘報物 配布, 私組織 運營, 匿名의 政治資金 提供 등 高費用 政治構造를 유발하는 政治慣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選舉法과 政治資金法을 개정하는 한편 法執行의 實效性和 公正性을 제고해야 함.
- 중·장기적인 방안으로는 公營選舉制 擴大, 中·大選舉區制導入, 比例代表制 擴大 등 選舉制度의 改善과 響應 등 選舉慣行에 대한 國民의 意識構造 改善을 통해 政治費用의 最小化를 追求해야함.

나. 政治費用의 陽性化 및 制度化

問題點

- 政治資金의 規模뿐만 아니라 政治資金 흐름의 不透明性도 選舉費用의 規模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함.
- 政治資金의 상당 부분이 비공식적이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조달되고 政治인과 公務員의 不正腐敗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政治資金의 陽性化와 制度化를 통한 흐름의 透明性 提高가 시급함.

政策方案

- 選舉費用의 法定上限線을 上向調整하고 法定 選舉費用의 범위를 넓혀 選舉資金 支出을 自由化함으로써 비현실적인 선거법으로 인한 不法行爲를 防止해야함.
- 選舉資金의 支出을 陽性化하는 대신 個人과 團體의 選舉資金 寄附額을 制限하고 選舉資金 寄附者에 대한 實名制를 실시하여 選舉資金 規模도 調整하고 흐름의 透明性도 確保하는 것이 필요함.
- 政黨의 內部改革을 통한 中央黨 縮小, 地區黨制度 改善 및 政黨運營의 民主化를 推進해야 함.

다. 理念과 政策을 통한 政黨政治 확립

問題點

- 한국 金權政治의 根本原因은 政黨들이 政策競爭을 통한 선거운동보다는 血緣·學緣·地緣에 바탕을 둔 비공식적인 緣故와 政治資金을 통해 有權者를 조직하고 支持勢力을 규합하기 때문임.
- 여야 구분 없이 政黨은 총재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非民主的 內部構造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政黨이 官僚化하고 中央黨과 地區黨의 규모가 비대해져 막대한 政黨 運營資金을 필요로 하게 됨.

政策方案

- 政黨의 政策競爭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國會 常設化, 議政活動 支援擴大 등 國會의 位相을 提高하여 政黨이 政策開發에 기여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를 마련해야 함.
- 또한 政策과 理念 중심의 새로운 정당이 制度圈에 進入할 수 있도록 比例代表制와 같이 進入障壁이 낮은 選舉制度를 導入해야 함.

7. 韓半島 平和・繁榮을 指向하는 南北關係

가. 韓半島 平和定着에 最優先順位를 두는 統一政策

問題點

- 현 統一政策은 形式的 宣言 혹은 提案 등으로 주도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일관되고 있으며, 吸收統一을 부인하면서도 내면적으로 吸收統一戰略을 추구하고 있으며 統一問題를 國內政治의 道具化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음.
- 形式的 提案 혹은 宣言등은 양측 주민에게 서로 다른 統一觀을 형성시켜 오히려 統一에 장애가 되며, 吸收統一을 지향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對北戰略은 北韓의 危機意識을 자극하여 도발적으로 만들 위험이 있음. 또한, 南北問題를 國內政治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의구심은 國論分裂 및 統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져옴.

政策方案

- 統一은 통일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韓半島 平和定着에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安保 最優先 政策으로 戰爭抑制力을 強化하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國際外交에 의한 平和維持 努力을 強化해야 함.
- 강력한 安保의 기초위에 相互 實體認定과 相互交流 및 對話通路를 유지해야 함.

- 經濟的 能力培養을 통해서 國家力量을 축적하고, 탈북자들이 남한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지원을 하는 등 實質的이고 內面的인 統一準備를 해야 함.

나. 民間中心의 南北韓 經濟·交流 擴大

政策方案

- 南北間의 信賴關係의 未形成, 法的制度的 缺如 및 南北韓 當局者들의 恣意的 行爲에도 불구하고 南北交易은 1989년 100여만불에 도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6년에는 총2억4천만달러 정도에 달하였으며, 북한을 방문한 남한주민수도 총 213명에 이르고 있음.
- 이러한 交流는 政治的 緊張關係에도 불구하고 相互間 經濟的 利害關係를 바탕으로 民間次元에서 자발적으로 수행되고 있음.
- 우리 政府는 현재 총 15개 企業의 對北投資를 승인하고 한 사업당 5백만달러의 投資限度額을 유지하고 있지만 對北投資限度額의 上向調整과 許可條件의 緩和등 法的·制度的 裝置를 마련하여 南北交易 및 人的 交流의 확대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함.
- 人道主義的 측면에서 食糧援助 및 醫療支援 등을 지속하며, 北韓의 改革開放 노력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北韓體制의 延着陸을 誘導.

8. Global 體制에 對應하는 對外政策

가. 國際規範의 積極적 수용과 國際社會에서의 位相提高

問題點

- 國際規範의 消極的 受容과 對外開放 未洽으로 法과 慣行이 國際基準에 일치하지 않아 世界經濟秩序 흐름에 副應하지 못하고 있음.

政策方案

- WTO의 貿易 및 投資, 國內産業 支援, 知的財産權 保護 등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관련 國內規範 및 制度를 再整備하여야 함.
- 同기구의 競爭政策, 勞動政策, 環境政策, 技術政策 등 「뉴라운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體制整備를 추구하여야 함.
- OECD의 多者間投資協定(MAI)이나 電子商去來(Electronic Commerce) 등에 대한 논의에도 能動的으로 參與.
- APEC, ASEM 등 아시아지역의 經濟協力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시아 지역에서의 主導權 確保에도 노력해야 함.

나. 攻擊的이고 能動的인 通商外交

問題點

- 國內産業 保護爲主의 消極的인 市場開放政策으로 通商協商에서 수세적 立場에 처하게 되어 攻擊的이고 能動的인 通商外交를 펼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음.

政策方案

- 積極的인 市場開放을 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攻擊的이고 能動的인 通商外交 展開.
- 우리 국민과 기업의 海外活動上의 隘路를 효과적으로 發掘·解消하고 국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통상외교체제를 통합·정비.

새政府의 政策課題

1.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대책

임금·노사관계
금융시장 개방 확대
부실기업 및 부실금융기관의 조기 정리
금융실명제 보완
민간품심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위기관리 경제팀 운영

2. 작고 효율적인 정부

행정
① 정부조직의 개편
② 성과지향적 고객만족 행정의 구현
③ 공무원의 계약채용 및 정년제 폐지

민영화
① 공기업 민영화 추진체계의 개선
② 주요 공익산업의 민영화
③ 공익산업위원회 설치

지방화
① 기업형 지방행정의 구현
② 지방정부의 기업유치 경쟁무도
③ 지역개발의 지방주도
④ 기업형 지방재정 운영

재정 및 예산

- ① 민간기업식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 ② 98개에 이르는 각종 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 및 정비
- ③ 예산한도 재량 부여 및 효율배당제 적용

조세 및 세정

- ① 조세체계의 단순화
- ② 국제규범에 맞는 조세지원제도
- ③ 조세의 개선

3. 기업하기 좋은 경제환경

규제개혁

- ①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선
- ② 정책적 규제의 개혁
- ③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경제법령 및 규제의 개편

경쟁촉진 정책

- ① 경제력집중억제정책의 경쟁정책으로 전환
- ②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폐지
- ③ 고유업종제도·수의계약제도 등 경쟁제한적 정책의 폐지
- ④ 시장경쟁원리 작동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벤처기업의 활성화

- 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확대와 규제완화
- ②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토지

- ① 토지이용규제 역파를 통한 토지공급의 확대
- ② 토지이용규제권의 지방정부 이관
- ③ 부동산투자신탁제도 도입
- ④ 수도권 규제 폐지
- ⑤ 투자억제책의 폐지

금융

- ① 은행소유구조에 대한 규제 완화
- ②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은행 비상임이사제도 개편
- ③ 금융기관의 진입규제 완화
- ④ 직접금융시장에서의 규제 완화 및 철폐
- ⑤ 관치금융 철폐

4.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반조성

사회간접자본

- ① 민자유치제도의 실효성 제고
- ② 동북아 품심항만 구축
- ③ 종합물류정보망의 구축

과학기술

- ① 과학기술처를 기술혁신부로 개편
- ② 위탁연구경쟁입찰제 도입
- ③ 기초연구 투자집중제 도입
- ④ 특허행정 정보화 및 기능효율화
- ⑤ 사이언스파크 조성과 기술보호 강화

교육

- ① 정부간섭의 배제를 통한 대학간의 경쟁 촉진
- ② 초·중등교육의 수요자 중심 교육체제로 전환
- ③ 교육예산의 직업·기술교육에의 집중 투자

농업부문

- ① 42조원의 농업구조개선사업 및 15조원의 농어촌특별부가세 지원사업과 같은 부문자사업의 재검토
- ② 경제 작물 중심의 농업 구조조정
- ③ 농산물 유통체계에 경쟁도입
- ④ 농산물 유통정보 시스템의 확충
- ⑤ 법정도매시장 확충에 민간자본 참여
- ⑥ 농·어업협동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

정보화

- ①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
- ② 초고속통신망의 조기구축
- ③ 정보화 관련 법제도의 정비
- ④ 정보화 민력의 육성
- ⑤ 소프트웨어 벤처산업 육성
- ⑥ 통신산업의 경쟁육진

5.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 및 사회보장제도 확립

환경

- 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및 공공요금 가격체계 도입
- ②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환경규제로 전환
- ③ 민간자본 참여를 통한 기초환경시설 확충

사회보장제도

- ① 사회보험의 민간경제체제 도입
- ② 피보험자의 의료보험 선택권 부여

6. 경제를 뒷받침하는 저비용 정치구조

- ① 고비용 정치구조의 타파
- ② 정치비용의 양성화 및 제도화
- ③ 이념과 정책을 통한 정당정치 확립

7. 한반도 평화·번영을 지향하는 남북관계

- ① 한반도 평화정착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통일정책
- ② 민간중심의 남북한 경제·문화교류 확대

8. 글로벌체제에 부응하는 대외정책

- ① 국제규범의 적극적 수용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제고
- ②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통상외교

